

2016. 11. 21. 브리핑 참고자료

[2017 ~ 2021]

# 귀농·귀촌 지원 종합계획(안)

2016. 11.



농림축산식품부

# 목 차

<b>I. 종합계획 수립 개요</b> .....	<b>1</b>
1. 계획 수립 배경 .....	1
2. 그간 정책 및 성과 .....	2
3. 미흡한 점 .....	4
<b>II. 여건 및 정책 방향</b> .....	<b>5</b>
1. 여건 및 전망 .....	5
2. 귀농·귀촌 실태 및 시사점 .....	7
<b>III. 비전과 목표</b> .....	<b>11</b>
<b>IV. 세부 추진계획</b> .....	<b>12</b>
1. 청년층의 농업 창업 중점 지원 .....	12
2. 교육체계 개편 및 내실화 .....	14
3. 일자리·주거 등 안정적 정착 지원 강화 .....	15
4. 귀농귀촌 저변 확대 .....	17
5. 지역 주민과의 융화지원 강화 및 지원체계 개편 .....	18
<b>【참고】</b>	
1. 종합계획 시행후 변화된 모습 .....	19
2. 종합계획 목표 및 성과지표 .....	20
3. 귀농·귀촌의 사회적 편익 .....	21
4. 귀농·귀촌 지원 종합계획의 근거 및 내용 .....	22
5. 귀농·귀촌 지원 종합계획 수립 경과 .....	23
6. 2009년 및 2012년 대책 개요 .....	24
7. 귀농·귀촌 통합서비스 체계도 .....	2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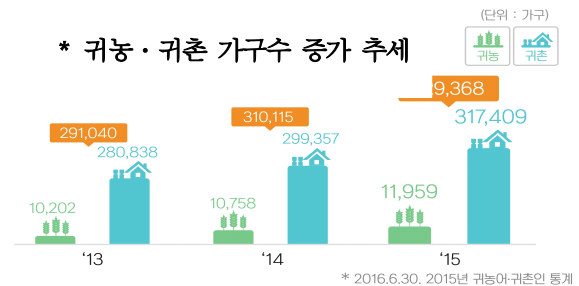
# I . 종합계획 수립 개요

## 1

## 계획수립 배경

- '98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등장한 귀농·귀촌 흐름이 '08년 금융위기, 저성장,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, 생태 가치 선호 등으로 '10년 이후 급증

- 최근 귀농·귀촌은 도시의 압출 요인과 농촌의 흡인요인이 사회 구조적 요인과 맞물리면서 지속적 사회 트렌드로 부각



- 도시민 농촌 유입을 통한 농업·농촌의 새로운 활력 창출을 위하여 다양한 귀농·귀촌 지원사업 추진

- 귀농귀촌종합센터 설치('14), 「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정('15)

- 귀농·귀촌 단계별로 정보제공·귀농 교육, 농지·주택 마련을 지원 하고,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도시민 유치지원 프로그램 추진

### < 귀농·귀촌 단계별 지원 정책 >

관심단계	실행단계	정착단계
정보제공, 교육 실시	귀농인의 연착륙 지원	창업자금, 영농기술 지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귀농귀촌종합센터 운영</li> <li>○ 귀농귀촌창업박람회</li> <li>○ 귀농귀촌 교육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도시민농촌 유치지원</li> <li>○ 귀농인의 집 조성</li> <li>○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</li> <li>○ 귀농인 실습지원(농진청)</li> <li>○ 정책자금 지원 조건 완화</li> </ul>

- 그간 양적확대의 성과가 있었으나 귀농 초기 소득감소, 일자리 부족, 지역민과 갈등은 해결해야 될 과제로 대두

- ▶ 귀농·귀촌 여건전망, 실태조사 결과 및 그간 정책 평가를 기초로 농촌 활력 증대를 위한 5년 단위 '귀농·귀촌 지원 종합계획' 수립

## 가 그동안의 주요 정책

◆ '08년 금융위기 이후 크게 늘어난 귀농·귀촌인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2차에 걸쳐 귀농·귀촌 지원 대책 수립·추진('09, '12)

□ (관심단계) 귀농귀촌종합센터를 신설하고 정보제공 및 교육 실시

- 온·오프라인 상담서비스, 정책정보, 빈집정보 등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
- 단계별·품목별 영농 기술교육, 농산물 가공·유통, 농촌생활 등 다양한 교육과정 개설

\* 단계별(기초·중급·심화·귀촌과정)·유형별(대학생·경찰·제대군인 등)과정 운영

□ (실행단계) 귀농초기 주요 애로사항인 주거문제 해소에 집중

- 귀농인의 집 조성(100개소)을 통해 임시 거주, 영농기반 마련 지원
-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(8개소) 운영을 통해 가족단위 농업·농촌 체험 및 영농기술 습득 기회 제공

\* 체류형센터 : ('13) 제천·영주 → ('14) 홍천·구례·금산 → ('15) 고창·영천 → ('16) 함양

□ (정착단계) 지자체 현장지원 기능을 강화하고, 귀농창업·정착 지원

- 귀농 창업 및 정착 지원을 위해 영농기술, 자금 지원 확대

\* 귀농창업자금 : ('12) 500억원 → ('13) 600 → ('14) 700 → ('15) 1,000 → ('16) 1,500

- 지자체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확대, 현장 상담, 기존 주민과의 융화프로그램 운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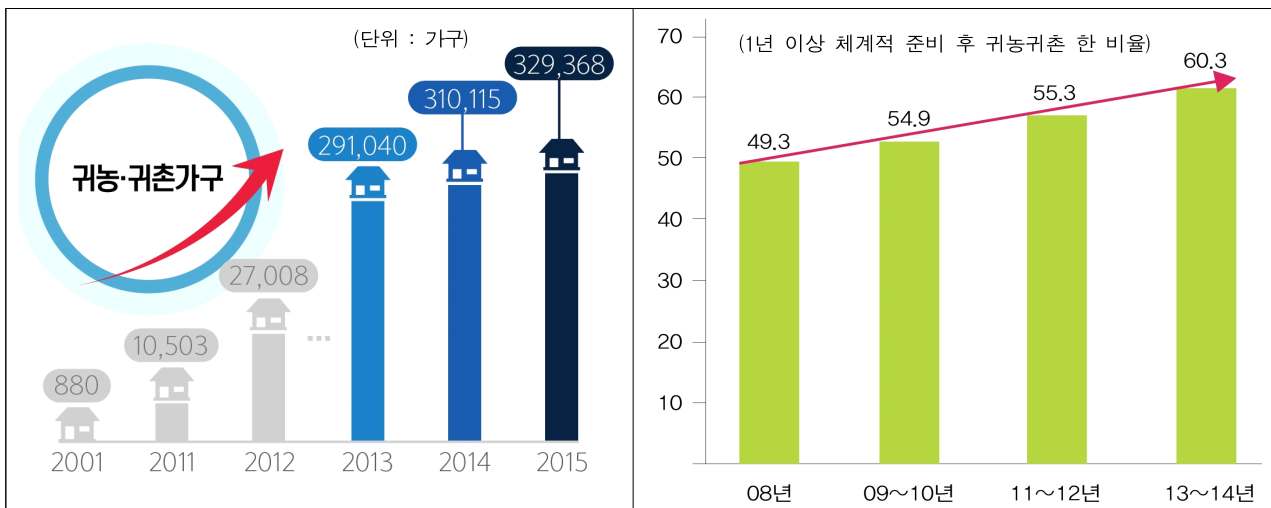
\* 지자체 귀농귀촌지원센터 : ('09) 10개 시·군 → ('16) 50

## 나 정책 성과

### ◆ 귀농·귀촌 인구의 지속적 증가,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성과 가시화

□ 사회적 흐름을 정책적으로 뒷받침 하여 귀농·귀촌이 크게 증가

○ 사전 정보제공·교육·실습지원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준비한 귀농·귀촌인 증가



\* 귀촌 기준 : '12년까지 전원생활 목적 이주 대상으로 한정, '13년부터 목적과 무관하게 도시에서 1년 거주 후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 모두 포함되어 귀촌가구 크게 증가

□ 귀농·귀촌인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촌 활력 기여 사례 확대

○ 다양한 경험, 전문성을 가진 귀농·귀촌인이 지역 공동체 리더, 6차 산업 창업, 농촌 공동체 활성화 등으로 지역 역동성 제고

- \* 고창군 마을이장 중 10%, 강원도 6차 산업 창업자 중 42%가 귀농·귀촌인
- \* 농촌의 40대 이하 중 귀농·귀촌인이 42.9%, 신규 취농가구 중 귀농가구가 53.1%
- \* 귀농·귀촌인의 생산자조직 참여율은 농업인 23%의 2배(59.6%)

□ 법률과 기구 등 귀농귀촌 지원정책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

○ 귀농귀촌종합센터 설치('14), 「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('15)

○ 지자체 귀농귀촌지원센터 확충(50개소)으로 현장 상담, 정보 제공

- ◆ 양적확대에 치중하여 체계적인 정착지원 및 지역사회 융화 등 내실화 미흡
- ◆ 귀농·귀촌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종합적 거버넌스 구축 미흡

□ 은퇴자 등 도시민의 농촌 유치를 위한 양적 확대는 이루었으나, 젊고 유능한 청년 후계 인력 유입과 소득창출 지원 한계

☞ 2030세대 등 청년층 귀농·귀촌 활성화를 위한 소득·일자리·창업 지원 등 타겟별 맞춤형 지원 정책 강화

□ 공급자 중심 지원 정책으로 수요자 관점의 종합적·체계적 지원에 한계

☞ 정책·정보제공 등 귀농·귀촌 지원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수요자 요구와 특성을 반영한 교육체계 개편

□ 귀농·귀촌 개인에 중점을 둔 정책 추진으로 기존 지역민과의 공동체 융화 지원에 한계

☞ 귀농·귀촌인과 지역주민간 융화지원을 강화하고 공동체 활력 창출 프로그램 강구

□ 귀농 중심의 정책 지원으로 귀촌인에 대한 정책적 고려 부족

☞ 귀촌인의 농업 취·창업 지원, 농촌 지역의 다양한 서비스 수요와의 연계 등 귀촌인에 대한 정책 지원기능 강화

□ 중앙과 지방, 민간조직간 연계 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 한계

☞ 중앙과 지방, 민간의 지원조직을 연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귀농귀촌 지원 시스템 구축

## Ⅱ. 여건 및 정책 방향

### 1

### 여건 및 전망

#### 가 귀농·귀촌 정책 여건

- (기회 요인) 전원생활, 생태적 가치 선호 증가와 함께 미래산업으로서의 농업·농촌에 대한 인식 변화로 귀농·귀촌에 대한 관심 확대

\* 귀농·귀촌 이유(실태조사) : 자연환경(33.1%), 농업·농촌의 비전과 미래(11.5%)

- 도시농업·주말농장 확산, 귀농·귀촌 관련 언론·방송노출 확대, 귀농귀촌 성공사례 증가 등 사회적 관심 증가

#### < 귀농 관련 언론 보도 건수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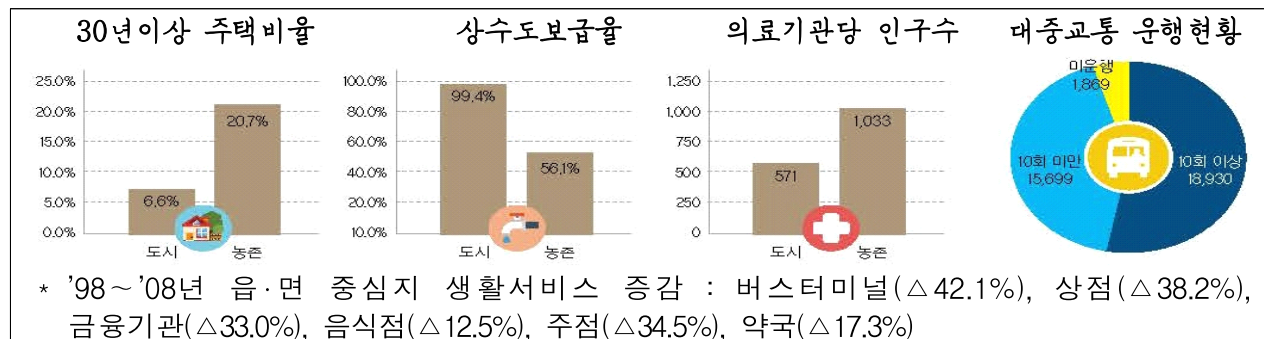
연도	2008년	2009년	2010년	2011년	2012년	2013년	2014년	2015년
전국 종합일간지	239	419	403	413	626	631	720	889
지역 종합일간지	947	1,801	1,852	2,224	3,589	4,226	3,753	4,154
계	1,186	2,220	2,255	2,637	4,215	4,857	4,473	5,043

(단위: 건)

<출처>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(www.bigkinds.or.kr)

- (위협 요인) 인구 감소·고령화로 인한 농촌지역 구매력 저하 등으로 농촌 주민 삶의 질 인프라 및 서비스 전달체계 미흡

- 공공부문을 제외한 대부분 상업적 서비스 제공 사업체 수 감소 추세



- 귀농 초기 농지·주택구입 등 기반 조성에 상당한 비용 소요

\* 귀농 첫해 평균 경지면적('13 : 0.45ha) 확보에 소요되는 농지구입 비용은 경기 3억 7,986만원, 충북 7,049만원, 경북 5,794만원

## 나 귀농·귀촌 전망

◆ 최근 5년간 귀농·귀촌 추세(연평균 2.9%증가), 베이비 부머세대 은퇴 등을 감안시 향후 5년간 귀농·귀촌 인구는 증가세 유지 전망

○ '21년 귀농가구는 '15년보다 17.2% 증가된 약 1만 4,000가구로 추정(KREI)

□ (구조적 요인) 국내외 경제의 저성장 기조,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 가속화, 기대 수명 연장 등 고려시 귀농·귀촌 증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

○ 향후 5년간 은퇴 연령(55~65)인구는 18.5% 증가 예상(연평균 3.7%)

\* 은퇴 연령층(55~65세) 인구 추계(통계청) : ('16년)744만명 → ('21년)882만명

□ (미래 농업 전망) 스마트 팜, 6차 산업화, 농촌관광 등 농업 분야의 새로운 성장 가능성

○ 젊은 층의 농업에 대한 인식 변화,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증가

○ 짐 로저스 : “농업은 향후 가장 유망하고 잠재력 뛰어난 산업”

○ 6차산업 경영체 인력 수요 : ('13) 369천명 → ('20) 562 → ('25) 725

○ 국내외 농촌 관광객 : ('13) 829만명 → ('15) 870 → ('16) 1,000

○ 협동조합·사회적기업 증가 등 농업분야 인력수요 확산 추세

< 농촌 지역의 자생조직 설립 추이 >

(단위 : 개)

연도	2008	2009	2010	2011	2012	2013	2014
사회적 기업	30	12	40	22	31	66	82
협동조합	-	-	-	-	9	557	594

(출처 : 「농촌지역의 사회적 경제 실태와 활성화 방안」 2015. KREI)

□ (소득 요인) 40세 미만 청년층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보다 높아 농촌을 기회의 장(場)으로 생각하는 젊은 층 증가

○ 다만, 40세 이상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에 비해 낮은 현실은 장년층 이상의 귀농·귀촌 선택에 애로요인

(단위 : 천원, 2015년 기준)

구 분	~39세	40~49세	50~59세	60~69세	70세 ~
농가소득	95,405	50,043	60,703	40,133	24,368
도시근로자 평균	53,182	62,560	66,207	42,065	

\* 평균소득 : 농가 37,215천원, 도시근로자 57,800천원(통계청. 가계동향조사)



## 2

## 귀농·귀촌 실태 및 시사점

### 가 귀농·귀촌 인구 동향

#### □ 도시-농촌 인구이동 패턴 변화

○ '07년 이후 농촌 인구 순유입세로 전환, 순유입 규모 점증

\* '13년부터는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농촌 인구 순유입 발생

< 도시와 농촌 사이의 인구이동 추이 >

(단위: 명)

연도	농촌(군)→도시(A)	도시→농촌(군)(B)	농촌(군 지역)으로의 인구 순유입(B-A)			
			계	수도권	지방대도시	중소도시
2006	458,524	442,086	△16,438	△12,041	△831	△3,566
2007	462,431	472,048	9,617	1,967	9,108	△1,458
2015	333,773	375,073	41,300	21,589	19,334	377

(출처 : 주민등록인구이동통계, 통계청)

#### □ 최근 5년간 매년 1.1만 가구 수준이 귀농, 약 30만 가구가 귀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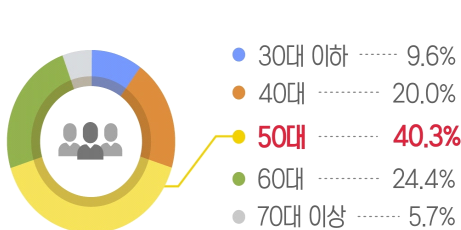
○ 귀농 가구주는 50대(40.3%), 60대(24.4%), 40대(20.0%) 순('15 기준)

\* 50대 귀농 가구주 비율 : ('11) 37.4% → ('15) 40.3% (2.9%P ↑)

○ 40세 미만 청년 귀농은 연 1,150가구로 40세 미만 전체 농가의 9.0% 수준이 매년 유입되어 청년 농가 증가에 기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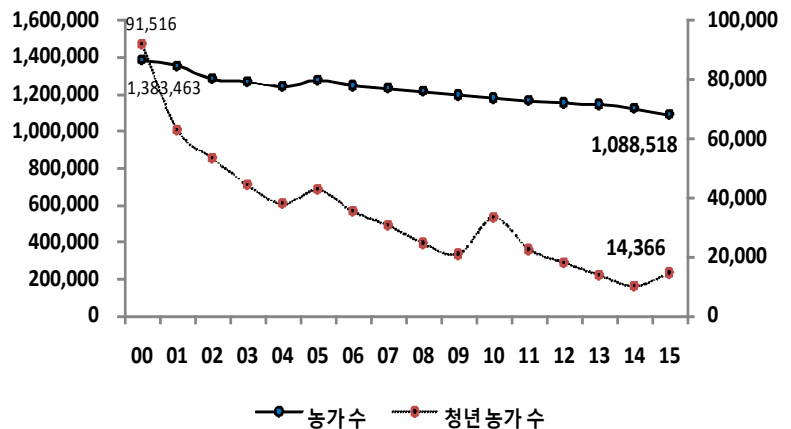
\* 40세미만 귀농/농가 : ('13)1,164/13,586가구→('14)1,110/9,947→('15)1,150/14,366

< 귀농가구주 연령별 구성비 >



\* 2015년 귀농귀촌 통계

< 농가 및 청년 농가수 감소 추세 >



☞ 농업 후계인력 확보를 위해 청년층 귀농·귀촌 촉진 정책 절실

## 나 귀농·귀촌 정착 실태

### ① 귀농·귀촌 유형

- 귀농은 농촌출신이 도시 은퇴 후 연고지로 이동하는 U턴형이, 귀촌은 농촌출신이 은퇴 후 비연고지로 이주하는 J턴형이 대세

	U턴	J턴	I턴
귀농	41.4%	26.8%	25.0%
귀촌	28.0%	31.3%	30.5%

- 귀농·귀촌 전 직업유형은 자영업, 사무직, 생산·기능직, 전문직, 판매서비스 직 등 농업과 무관한 다양한 유형의 직업경력

\* 귀농 : 자영업(31.1%), 사무직(20.7%), 생산·기능직(10%), 관리자(7.9%), 전문직(7.5%)

\* 귀촌 : 자영업(27.3%), 사무직(16.9%), 생산·기능직(8.6%), 판매·서비스(7.6%), 전문직(6.5%)

- 영농활동 수행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영농기술/경험부족(36.2%)

 귀농·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영농기술 교육 강화

### ② 귀농·귀촌 가구의 소득

- 귀농 5년차까지 가구 평균 소득은 2,645만 원, 2천만 원 미만 비율 45.9%로 귀농 가구의 초기 경영 기반 취약

\* 귀농가구 평균 소득은 평균 농가소득 3,722만원의 71.1% 수준

- 농촌 이주 직후 가구 총소득의 급격한 하락, 3년차 이후 안정화 경향

< 귀농·귀촌 가구의 평균 소득 변화 >

(단위: 만 원)

구 분		귀농 직전 연도	이주 첫해	이주 2년차 (15년이주)	이주 3년차 (14년이주)	이주 4년차 (13년이주)	이주 5년차 (12년이주)
귀 농 가 구	농가소득	4,574	1,781(61.1% ↓)	1,984	3,071	3,145	3,242
	농업소득	-	600	644	1,523	1,666	1,853
	농외소득	-	773	965	693	959	960
귀촌 가구		4,108	2,496(39.2% ↓)	2,585	2,976	2,988	-

(출처 : 한국갤럽(2016), 『2016년 귀농귀촌 실태 조사』)

 이주 초기 소득 확보를 위해 충분한 사전교육 등 준비지원강화 필요

### ③ 주거 형태

- 귀농 초기 안정적인 주거 확보 어려움으로 임차와 임시거주 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

\* 귀농 초기 주거 형태 : 자가 64.8%, 임차 22.2%, 임시거주 4.0%, 마을 빈집 3.8% 등

\*\* 정착자금 주요 용처 : 귀농가구(농지 40.3%, 주택마련 34.5%), 귀촌가구(주택마련 68.8%)

 **이주 초기 주거 부담 해소 및 다양한 형태의 주거 지원 필요**

### ④ 귀농가구의 농업 창업 현황

- (농지) 귀농가구 평균 농지면적은 0.78ha(소유 0.48, 임차 0.30)

\* (귀농 2년차) 0.60ha → (3년차) 0.72ha → (4년차) 1.18ha로 점차 증가 추세

- (투자규모) 농지·가축·시설 등의 초기 투자에 9,346만 원, 귀농 1년 이후 추가 투자에 2,727만 원을 지출(총 1.2억원 수준)

\* 귀농가구 중 정책 자금 수혜자 비율은 보조금 18.4%, 융자금 19.1% (귀농 5년 이내)

〈 농지·시설 투자규모 〉


(단위 :만 원)

구 분	초기 투자(귀농 후 1년 이내)	추가 투자
농지/가축에 대한 투자액	6,523	1,282
시설 투자액	2,823	1,445
합계	9,346	2,727

(출처: 한국갤럽(2016), 『2016년 귀농귀촌 실태 조사』)

- (영농 활동) 귀촌 가구 중 29.1%가 4년 이내 농업에 종사(농업 경영체등록 20.1%)

\* 귀촌가구 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시작 시기는 1년 이내 83.7%, 2년 이내 97.9%

 **귀농창업 자금 지원 확대, 귀촌인의 농업전환 지원 강화**

### ⑤ 귀농·귀촌 가구의 농외 경제활동

- 농산물 가공, 임금 노동, 자영업 등 농외 경제활동을 하는 귀농가구 비율은 45.3%, 시간이 지나면서 농외 경제활동 참여율 상승

- 농외 경제활동 이유는 '농업소득 부족' 72.7%, 재능 활용(12.8%), 사회생활 참여(4.8%) 순

- 39세 이하 귀농 가구의 농외경제활동 비율은 81.8%로, 젊은 귀농층의 6차 산업 등 참여 활발

\* 농외 경제활동 : 농산물·가공식품 판매(11.4%), 자영업(9.3%), 일반 직장 취업(8.4%) 순

\*\* 농외 경제활동율 : 귀농 2년차 42.5% → 3년차 44.1% → 4년차 45.7% → 5년차 48.9%

○ 귀촌가구 중 경제활동 참여 비율은 61.9%, 농사(29.1%), 자영업(15.1%), 일반 직장 정규직 취업(13.3%), 임시직(6.6%) 순

\* 귀촌가구의 경제활동 수행시 어려움은 지식·기술 부족(24.9%), 정보 부족(16.2%), 지역내 인프라 부족(13.6%), 자본금 부족(11.1%) 순

#### **농업 창업 지원 이외에 6차산업 등 소득원 연계 정책 강화**

### **⑥ 지역사회 활동**

○ 귀농가구는 ‘마을 회의·행사’, ‘귀농·귀촌인 모임’ 등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나, 귀촌가구는 상대적으로 소극적

\* 귀농가구 지역 모임 참여 비율은 마을회의·행사 56.7%, 귀농·귀촌인 모임 40.5%인 반면, 귀촌가구는 ‘마을 회의나 행사(34.8%)’외에는 소극적

○ 지역민과의 주요 갈등 원인은 문화(17.1%), 선입견과 텃세(13.1%) 순

#### **지역민과의 화합·융화를 위해 다양한 소그룹 형태 모임, 지역주민 대상 교육 강화**

### **⑦ 기타 정책 지원**

○ ‘정보 취득 어려움’, ‘복잡한 지원 자격 및 절차’, ‘실효성 부족’을 귀농·귀촌 정책의 문제점으로 인식

\* 정보 취득 경로 : 가족 또는 지인(54.6%), TV·인터넷(36.7%), 귀농·귀촌 교육(15.6%) 순

#### **수요자 입장에서 종합적인 ONE-STOP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**

### Ⅲ. 비전과 목표

#### 비전

**청년의 꿈이 실현되는 활력 넘치는 농촌**

#### 목표

▶ **5년간 청년(39세 이하) 귀농 창업 1만 가구 육성**

● 귀농가구 중 30대 이하 가구 비율 : '17) 8.0% → '21) 12.0%

▶ **귀농 5년차 평균 가구소득을 농가 평균까지 향상**

● 귀농 5년차 가구 평균소득 '15) 농가 평균의 70% → '21) 90%

▶ **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간 상생협력으로 농촌활력 증대**

● 마을행사 / 회의 참여비율 '16) 56.7% → '21) 80

#### 5대 추진 전략

전략

1

**청년층의 농업창업  
중점 지원**

전략

2

**교육체계 개편  
및 내실화**

전략

3

**일자리,주거 등  
정책지원 강화**

전략

4

**귀농 귀촌  
저변 확대**

전략

5

**융화지원 강화 및  
지원체계 개편**

#### 17개 추진 과제

○ 청년 창업농 육성 지원

○ 6차 산업 창업 지원

○ 귀농귀촌 교육체계 개편

○ 관심 계층별 타겟팅 교육 강화

○ 온라인 교육 확대

○ 지역일자리 연계 지원

○ 귀촌인 농업분야 취· 창업 지원

○ 귀농초기 현장실습 확대

○ 귀농인의 집 조성 확대

○ 소규모 저비용 임대주택 조성

○ 주택구입 자금지원 확대

○ 통합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

○ 귀농귀촌 박람회 운영 개선

○ 대학생 - 농촌마을 교류 확대

○ 지역주민과 융화지원 강화

○ 귀농귀촌 협의회 구성 운영

○ 지자체 현장 중간지원조직 육성

**귀농귀촌 민관거버넌스 구축**

## IV. 세부 추진계획

### 1

### 청년층의 농업 창업 중점 지원

#### 〈 추진 방향 〉

- ◆ 현장 밀착형 집중교육과 실습비 지원으로 청년 창업농을 중점 육성
- 6차 산업과 연계한 청년 창농 인큐베이팅 교육시스템 도입

#### 1-1

#### 청년 창업농 육성 지원

- 신규 창농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현장 밀착형 기술·경영 교육을 통해 창농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팅 교육시스템 도입

\* 영농 어려움(실태조사) : 영농기술/경험 부족 55.3%, 시설·자금부족 40.1%

- 지역 선도농가, 농업마이스터, 신지식인, 우수법인 등 현장 실습 교육이 가능한 곳을 '청년 창농 교육농장'으로 지정·운영

- 2018년부터 도별 10개소(총 90개소)를 목표로 연차적으로 확대

\* 연차별 운영 계획(누계) : ('18) 15개소 → ('19) 30 → ('20) 60 → ('21) 90

- 졸업 후 바로 창농이 가능하도록 귀농 예정지역 교육농장에서 1~2년간 머물면서 전문 영농기술, 유통·가공, 지역민과의 교류 등 종합 교육

- 도제식 교육이 가능 하도록 교육농장 당 학생수는 5명 이내에서 운영

- 교육농장 졸업 후 창업시 창업자금 우선 지원

- 귀농창업자금 신청시 청년층 우선 지원

\* 융자금리 인하(2% → 1%) 및 농신보 우대보증 한도 상향조정(1억원 → 2억원)

\*\*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 사업 결과를 평가하여 세부 시행방안 마련

( 사례 : 일본의 청년 신규취농 급부금 제도 )

▶ 청년 취농자에게 유형별로 최장 7년 동안 보조금(연간 150만 엔) 지급

\* 준비형 : 농업대학·선진농가·농업법인 등에서 연수시 최장 2년간 보조금 지급

\* 경영개시형 : 독립적 영농 실시 농가에 최장 5년간 지급

### □ (교육 강화) 귀농·귀촌인 대상 6차 산업 교육과정 신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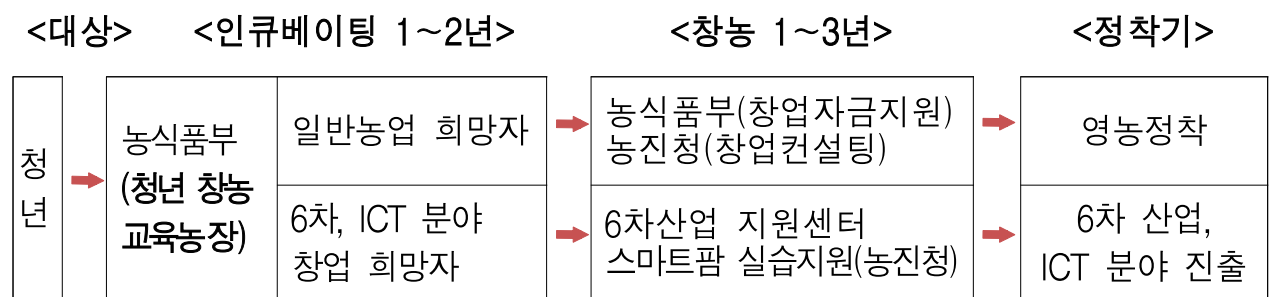
\* 귀농·귀촌인 6차산업 인지도('15. 교육생 설문조사) : 알고 있음 37.8%, 들어본 적 있음(31.4), 모름 30.8%

- 농촌체험관광, 농산물가공, 홍보마케팅분야 교육 프로그램 개발, 6차 산업 법인과 연계한 취업교육과정 개설 등
- 6차 산업화 지구(16개소) 내 귀농창업 아카데미 개설로 지역단위 6차 산업 발전의 핵심주체로 육성

### □ (창업보육) 지역별 6차산업 지원센터(10개소), 귀농귀촌지원센터 간 협업체계 구축으로 정보·경영·기술 등 체계적·종합적 지원

- 지역별 6차산업 관련 정보제공, 지원 정책 안내
- \* 6차산업 경영체는 약 7,400개소, 인증사업자(1,020개소) 기준 평균매출액은 약 9.3억원, 전체 경영체 중 27.4%가 도시에서 귀농한 것으로 조사('15년)
- 농산물종합가공센터(44개소)를 통한 창업코칭·기술 교육, 안테나숍, 6차산업 전용판매관(네이버, 하나로마트 등)을 통한 판로 지원
- 경영·회계·법률·마케팅 등 현장 컨설팅 지원

< 청년 귀농 창업 활성화 지원 체계도 >





## 〈 추진 방향 〉

◆ 귀농·귀촌 유형별·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로 개편하고 교육 품질 제고

□ 분야별·과정별 교육 모델 개발을 통해 교육프로그램을 표준화

\* 교육기관 분류, 표준교육프로그램 개발('17) → 교육기관 지정·운영('18)

○ 교육과목·유형·수준별로 교육기관을 전문화하고 유망 소득 작목 등 특화 과목 개설 확대

\* 현재 종합센터 자체교육, 민간기관 위탁교육 4개 과정(귀농기초, 중급, 심화, 귀촌과정), 2030세대 취·창업과정, 군인·경찰, 대기업 등 대상 기획공모과정 운영 중

○ 강사요원 자격요건 및 심사를 강화하여 교육 품질 제고

□ 귀농 관심 계층별 타겟팅 교육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

○ 청년층 : 전역 예정 군인, 직장인 야간과정 등

○ 중장년층 : 퇴직 예정 군인·경찰, 대기업 퇴직자 과정 등

○ 교육생 DB를 구축, 정착율 등 조사 및 정착 이후 발전단계별 교육 안내 등에 활용

□ 온라인 교육 확대 및 콘텐츠 강화

○ 접근성 제한 등 문제해결을 위해 온라인 교육을 확대하고 콘텐츠를 보강

- 현행 이론중심에서 영농기술, 성공·실패 사례 등 내용 보강

○ 오프라인 교육을 TED형 영상으로 제작, 교육의 실효성 제고

\* TED(Technology Entertainment Design) : 기술, 오락, 디자인 관련 강연회

□ 귀농귀촌 교육기관 평가 강화로 경쟁 체제 유도

○ 매년 교육기관 평가를 실시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정시 반영

\* 농정원 귀농귀촌 교육기관 지정 현황 : ('15) 45개 기관 → ('16) 39



## 3

## 일자리·주거 등 안정적 정착 지원 강화

## 〈 추진 방향 〉

- ◆ 지역사회 일자리 연계 및 영농 실습교육 등 안정적 소득기반 지원
- ◆ 귀농 초기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주거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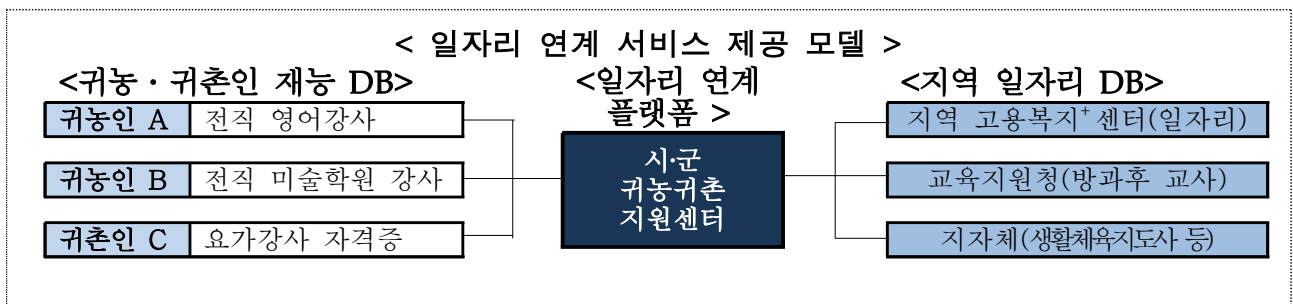
## 3-1

## 지역 일자리 연계 지원

□ 지역 귀농귀촌 지원센터에 일자리 연계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, 귀농·귀촌인의 재능과 경력을 활용한 농외 취업 지원

- 농외 일자리 희망 귀농·귀촌인을 대상으로 인력 풀(pool) DB 구축, 지역 일자리와 연계 서비스 제공
- 고용부 고용복지+센터, 교육부 방과후 학교 운영, 문체부 '어르신 생활체육지도사', '문화이모작' 사업, 여성가족부의 '새일센터', 지자체의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 추진

\* 귀농·귀촌인 중 기술자격증(기능사, 기사, 기술사 등) 보유자 31.1%, 기타 자격증 보유자(교사, 보육사, 사회복지사, 조리사, 상담사 등) 21.5%



□ 청년 귀촌인의 농업 법인 취업 및 농산업 창업 지원

- 일정규모 이상 농업 법인 또는 6차산업 인증기업 등이 청년 채용시 연수비(월 80만원) 지원(최장 3년)

\* 매출 100억 이상 농업회사법인 260개(통계청, 2014 농어업법인조사보고)

- 귀촌인 대상 스마트팜 현장교육 등 영농창업교육과정 개설·운영(농업기술센터)
- 중기청 청년 창업지원사업(청년창업사관학교, 청년창업기업지원자금,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등) 연계 협업으로 농산업 분야 활용도 제고

- 귀농 초기 농업인과 선도농가를 연계하여 일정기간(3~5개월) 멘토링 및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선도농가 실습지원사업 확대(농진청)

○ 사업물량 : (현행) 500명/년 → (확대) 1,000명/년

### 3-2 주거지원 강화

- 귀농인의 집 조성 확대로 초기 주거 부담 완화

○ 농촌의 빈집 수리 또는 소형 주택을 신축하여 예비 귀농·귀촌인에게 단기 임대(1년 이내)하는 귀농인의 집 확대

- ('15까지) 70개소 → ('16) 140 → ('17) 210 → ('21) 500(누계)

\* 귀농직후 주택 형태('15) : 자가(신축·구입) 55.5%, 임차(전세, 월세) 27.5, 귀농인의 집 8.0, 마을내 빈집 3.2, 기타 5.8

○ 지역개발 사업으로 건설된 시설 중 유희시설 등을 '귀농인의 집'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

- 귀농·귀촌 주택단지 시범사업 추진(LH)

○ 민간주도로 30~60호 규모의 단독 주택단지를 조성, 귀농·귀촌인에게 분양·임대('18)

- 전국을 4대 권역으로 구분, 권역별 1~2개 지자체 공모·선정하여 추진
- 임대의 경우 4년간 거주 후 주택 구매 허용

- 가족단위 이주 및 영농실습을 위한 「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」는 사업 운영 성과 평가 후 확대 검토

\* '16) 5개소(금산,제천,영주,홍천,구례) → '17) 8개소(고창,영천,함양)

- 귀농·귀촌인의 주택 신축·구입 자금 지원 한도를 현실에 맞게 단계적으로 확대 (5천만원 → 1억원)

## 〈 추진 방향 〉

◆ 귀농·귀촌 관련 정보제공을 수요자 중심으로 효율화하고, 청년층의 농업·농촌에 대한 이해 제고

□ 귀농·귀촌 관련 각종 정보를 한곳에서 얻을 수 있도록 통합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

○ 중앙정부 및 지자체 정책, 영농 전문가, 지역별 농지·주택 정보, 교육일정, 일자리, 지역특화 품목 등 각종 정보를 연계 종합 제공

- 귀농·귀촌 과정별 필요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'귀농·귀촌 네비게이션' 구축

- 인공지능형 귀농·귀촌 상담 시스템을 도입, 네이버 지식IN 등 온라인 포털사이트와 연계하여 상담 및 컨설팅 기능 강화

□ 귀농·귀촌 박람회는 일자리·취창업과 연계한 맞춤형 상담 기능을 강화하여 운영

○ 농업법인, 농촌 소재 기업의 구인·채용과 연계하고, 농촌 일자리 정보 제공

□ 대학생 농촌교류단을 조직, 농촌마을과의 자매결연을 통하여 농번기 일손 지원, 학습 및 취·창업 기회 제공

○ 마을과 연계된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관심을 제고하고 미래 창업 유도

## 〈 추진 방향 〉

- ◆ 귀농·귀촌인과 지역민의 상생협력으로 공동체 활력 창출
- ◆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정책 개발, 기관 간 협업 등 효율성 제고

## [지역주민과의 융화 지원]

## □ 귀농·귀촌인 및 지역주민 대상 융화 교육 확대

- 예비 귀농·귀촌인에 대한 농촌 생활·문화 교육을 강화하고, 지역 리더(이장, 부녀회장 등) 및 지역주민 대상 교육과정도 개설
  -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새해영농실용화교육('16년 : 30만명) 과정에 귀농·귀촌 과목 포함

## □ 작목반 등 지역내 학습조직에 귀농인 참여를 유도하고 다양한 '동아리 모임' 활성화

- 지역 귀농귀촌지원센터, 귀농·귀촌인과 마을 주민이 함께 하는 동아리 모임 및 행사(플리마켓 등) 지원

## □ 지역사회 발전 프로젝트를 지역민과 공동으로 구상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'지역사회 발전 공동사업 공모전' 도입

- 우수 아이디어는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지원

## [귀농귀촌 지원체계 개편]

## □ 민·관이 참여하는 중앙 귀농·귀촌 협의회 구성·운영

- 정부, 지자체, 귀농·귀촌인 단체,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현장 애로 해소 및 정책 협의

## □ 귀농·귀촌종합센터 내에 지자체 사무소를 통합운영 하여 시너지 효과 제고

## □ 지자체(시·군) 중간지원조직 육성으로 현장지원기능 강화

- 지역내 빈집·농지 등 알선, 생활상담 및 지역민과의 융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'귀농귀촌지원센터' 연차적 확대(50 → 140개)
  - 지원센터 운영은 현지 귀농인 단체 등을 활용하고, 운영비 일부 지원

## 참고 1

## 종합계획 시행 후 변화된 모습

### 종합계획 시행 후 변화된 모습

#### 구조 청년층이 빈약한 농업인구구조

8.8%



2016년

#### 청년층이 탄탄한 농업인구 구조

12.0%



2021년

#### 소득 귀농 · 귀촌인 소득 허약

3,721만 원



일반농가

2,645만 원



귀농가구

2,761만 원



귀촌가구

2016년

#### 귀농 · 귀촌인 소득 향상

농가 평균의 70%



2016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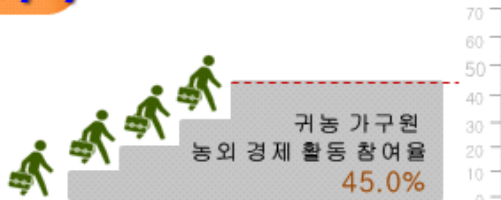
2021년

농가 평균의 90% 이상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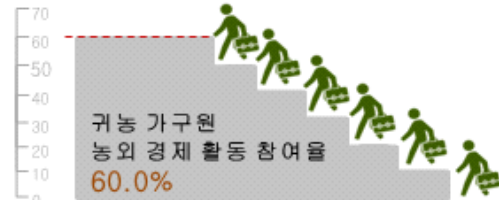
2021년

#### 일자리 일자리 부족



2016년

#### 일자리 연계 및 창출



2021년

#### 교육 청년농업인 전문교육기관 부재



2016년

#### 청년 농업인 전문 교육기관 확대



#### 조직 중간 지원 조직기반 미흡



2016년

#### 중간지원 조직 확충



2021년

## 참고 2

## 종합계획 목표 및 성과 지표

### 목표

**5년간 청년(39세 이하) 귀농 창업 1만 가구 육성**  
**- 지원 체계 정비, 통합정보 제공, 창업·일자리·소득 지원 -**

### 전략

#### 청년 중 농업창업

#### 교육체계 개편

#### 안정적 정착지원

#### 귀농귀촌 저변확대

#### 융화지원 지원체계

### 주요 과제

▶청년창농 교육  
농장 지정  
▶청년 창업  
지원 강화

▶교육체계 개편  
▶관심 계층별  
타겟팅 교육  
▶온라인  
교육 확대

▶일자리연계  
▶귀촌인 취창업  
지원 강화  
▶현장실습지원  
▶귀농인 집확대  
▶주택자금확대

▶통합정보제공  
시스템구축  
▶박람회 운영  
개선  
▶대학생 농촌  
교류 확대

▶지역주민과  
융화지원 강화  
▶귀농 귀촌  
협의회 구성  
▶중간지원 조직  
육성

### 성 과 목 표

2017

2021

### 성과 지표

■ 청년 귀농 유치를 통한 지역 활력 제고  
 - 30대 이하 청년 가구 비율( 15.9.6%)  
 - 청년 창농 교육농장 조성  
 - 청년 창농 교육농장 졸업생 정착율

8.0%  
-  
-

12.0%  
90개  
90%

■ 교육체계 개편 및 내실화  
 - 귀농귀촌 교육 수료생 만족도  
 - 교육 수료생 정착율

87.1점  
9.1%

93점  
15%

■ 귀농초기 안정적 정착지원 강화(소득,일자리)  
 - 농외 경제활동 참여율  
 - 귀농 5년차 가구 소득 (농가 평균 대비)  
 - 귀농인의 집 점유율

45%  
70%  
(210개)8.5%

60%  
90%  
(500개)15%

■ 통합정보제공을 통한 귀농귀촌 저변 확대  
 - 귀농귀촌 준비 과정 만족도

45.7%

70%

■ 융화지원 강화 및 지원체계 개편  
 - 마을행사/회의 참여율  
 - 귀농귀촌 정착율

56.7%  
90%

80%  
95%



### 참고 3

### 귀농·귀촌의 사회적 편익(KERI, 2012)

#### □ 분석 개요

##### ○ 분석 지역 및 대상 기간

- 귀농·귀촌으로 비용 편익이 발생하는 지역(서울 및 6대 광역시 도시민이 81개 군으로 이주할 경우 가정)을 대상으로 분석, 시계열 범위는 2000~2008년

##### ○ 계측 구분

- (편익) 도시 교통혼잡비용 및 환경오염 감소, 농업생산성 증가
- (비용) 도시의 집적경제 감소, 귀농귀촌 교육비용, 보조금

#### □ 분석결과 : 귀농·귀촌 1인당 사회적 순편익은 연평균 169만원

☞ 2015년 귀농·귀촌인 486,638명을 기준으로 추정할 경우 사회적 순편익은 연간 8,224억 수준

\* 귀농·귀촌 예산 165억원, 창업자금 융자 지원 규모 1,500억을 비용으로 추계 하더라도 연간 6,600억원 수준의 사회적 편익 발생

#### < 귀농·귀촌 1인당 연간 사회적 순편익 >

(단위: 천 원)

	귀속지(농촌)	유출지(도시)	순효과
교통혼잡 및 환경오염처리비용 감소	△ 7.6	628.6	621.0
교통혼잡비용 감소		590.7	590.7
하수처리비용 감소	△ 7.6	13.6	6.0
대기오염물질 처리비용 감소		24.3	24.3
(황산화물)		(3.3)	(3.3)
(질소산화물)		(15.3)	(15.3)
(먼지)		(5.7)	(5.7)
지역총생산 증가	21,948.5	△20,879.6	1,068.9
(지역임금상승효과)	(256.4)	(△144.4)	(112.0)
합 계	21,940.9	△20,251.0	1,689.9

## 참고 4

## 귀농·귀촌 지원 종합계획의 근거 및 내용

□ (근거) 「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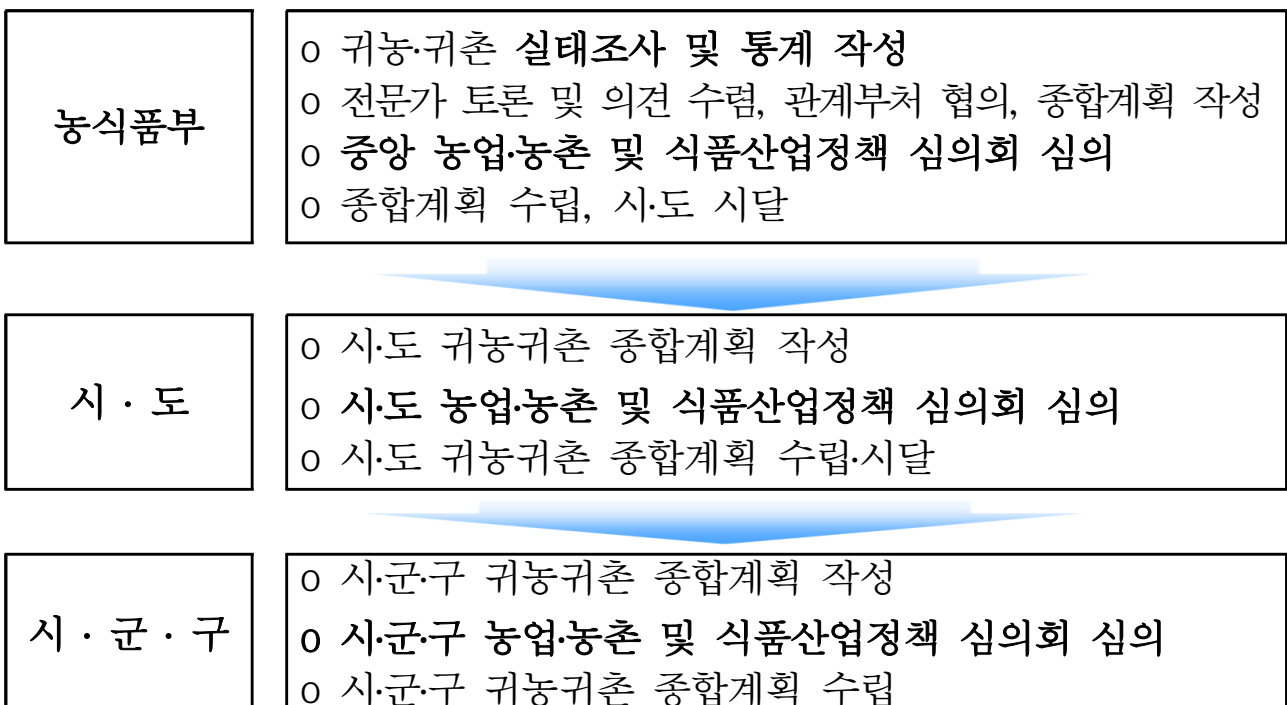
◆ (제5조)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귀농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 및 농어업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5년마다 “귀농·귀촌 지원 종합계획”을 수립하여야 함

□ (내용) 귀농·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 및 농업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반사항 포함

### < 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령 규정 사항 >

법률 제5조 제2항	시행령 제4조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귀농·귀촌 현황과 전망</li> <li>○ 기본방향과 목표</li> <li>○ 교육훈련과 전문인력 육성방안</li> <li>○ 주거, 생활 및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</li> <li>○ 홍보 및 정보화 촉진, 재원조달방안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정보·상담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</li> <li>○ 관련 기관 간, 귀농인-지역주민간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</li> <li>○ 복지증진, 자녀교육, 의료 및 교통 등 농어촌생활에 필요한 사항</li> </ul>

□ (절차) 귀농·귀촌지원 종합계획 수립 절차





## 참고 5

## 귀농·귀촌 지원 종합계획 수립 경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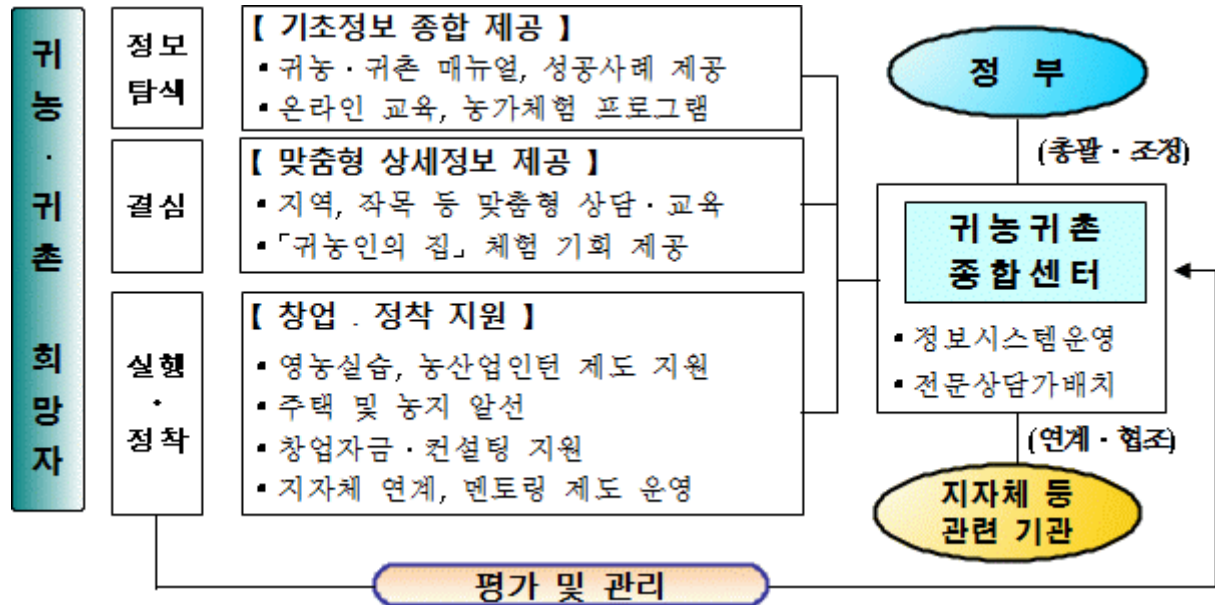
- (실태조사) 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귀농·귀촌 유형별 현황, 경영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
  - '15년 귀농·귀촌한 2만가구 중 각 1천 가구씩 표본추출 후 조사('16.4 ~ '16.10. 한국갤럽)
    - \* 조사대상 범위·방법·조사표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실시방안 사전 연구('15.10~'16.1.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)
- (연구용역) 귀농·귀촌 지원 종합계획 수립방향 제시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('16.4 ~ '16.10. 한국농촌경제연구원)
  - 귀농·귀촌 현황 및 정책성과 분석, 정책방향 설정, 정책과제 및 추진방안, 기관별 역할 분담 및 협력체계 구축 등
- (전문가 포럼) 농발위원·학계·언론계·현장활동가·지자체 공무원·농업인단체 등 귀농·귀촌 전문가 50명으로 전문가 포럼 구성('16.4)
  - '16.4.13. 제1차 토론회를 시작으로 6차(월 1회) 토론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
- (관계부처 협의) 귀농·귀촌 지원을 위한 재정사업을 발굴하고 관계부처 재정 투융자 계획 등 의견 수렴('16.10)
- (공청회) 귀농·귀촌 전문가, 지자체 담당 공무원, 농업인 단체 등 각계 인사 200여명이 참여하는 워크숍 개최, 연구 결과 발표 및 의견 수렴('16.9.21~22)

## 참고 6

## 2009년 및 2012년 대책 개요

### 【2009년 대책】

- 도시민 일자리 제공, 농식품 경쟁력 강화, 농촌 지역 주민 확보 등의 3가지 목표를 제시하고, 단계별 지원 정책 수립



### 【2012년 대책】

- 귀농·귀촌 양적 확대를 정책 목표(귀농 2만호 달성)로 설정하고, 6개 분야 정책 과제 제시

과 제	세부과제
1. 정보전달 시스템 개선 (One-Stop 서비스)	○ ‘귀농·귀촌 종합센터’ 확대·재편
2. 맞춤형 귀농·귀촌 교육 확대	○ 단계별(관심, 이주 등), 직업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 및 온라인 강의 추진
3. 농어촌 정착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 확대	○ 선도농가 실습 지원 사업 도입 ○ 영농·창업 및 주택마련 정책자금 융자 지원 ○ 농어촌주택 및 농지 구입에 따른 세제 감면
4. 지자체 도시민유치 활성화	○ 도시민 농촌 유치지원 사업 확대 ○ 수도권 중심지에 ‘귀농·귀촌 종합상담센터’ 설치
5. 사회적 붐 조성	○ 귀농·귀촌 박람회(페스티벌) 개최
6. 법적 지원 근거 등 제도 마련	○ 지자체의 귀농귀촌 활성화 제도 및 행정조직 정비 ○ 귀농·귀촌 관련 통계 정비 및 보완

## 참고 7

## 귀농·귀촌 통합서비스 체계도

